

# ‘조기 대선’ 가능성... 여야 잠룡들 움직임 본격화

탄핵 인용시 내년 봄·여름 대선 여, 한동훈·오세훈·홍준표 거론 민주당 이재명, 유력 후보로 평가 김동연·김부겸·김경수 등 준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내년 봄 또는 여름에 대선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야 차기 대선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움직임부터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그간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돼 왔다. 그는 지난해 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줄곧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

민과 함께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내겠다”고도 했다.

다만 한 대표는 이번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여러 번 입장을 번복했다. 당초 윤 대통령의 ‘즉각 직무 정지’를 공언했지만, 이후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을 내놨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는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탄핵안 통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며 선을 그었지만,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파 간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한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한 채 대선 준비를 할지,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대선 준비에 집중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또 다른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

의 행보도 주목된다. 오 시장은 당초 “더 이상의 현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탄핵에 반대했지만,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입장을 선회했다. 여야에 ‘책임총리제 전환’과 ‘비상 관리 내각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조기 대선에 대비해 더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정국에서 한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며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범죄자 이재명에 가담하는 레밍(난파선을 버리고 뛰어 내리는 쥐)”이라며 “당을 떠나라”고 공격했다. 홍 대표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탄핵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이밖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도 대선 레이스에 뛰어 들 가능성이 있다. 야권에 속해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조

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권 내 대권 잠룡들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당내 실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평가되지만 해소되지 않은 사법리스크, 약한 중도층 지지율 등이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이에 신(新)3김 등 비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독주 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 부각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대안으로 유력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소위 신3김 인사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존재감 부각에 나서며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를 준비 중이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들어 이 대표 대표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이재명 맞춤형’이란 지적이 나온 당헌·당규 개정 등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이 대표와 차별성을 갖추기 위한 움직임에 앞장섰다. 김부겸 전 총리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당내 현안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독일 유학 중 계엄 사태가 터져 급거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도 탄핵 표결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몸풀기에 나섰다. 김 전 지사는 지난 5일 귀국 일성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말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도층 확장을 강점으로 내건 비명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삼아 대선 준비 과정에서 윤신의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 비명계 인사는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은 묘하게 서로 영향분을 주는 적대적 공생관계였다”라며 “이제 윤 대통령이라는 위험한 강을 건너고 나면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다들 냉정해지고 당내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외신 “트럼프 2기 출범... 韓, 정치적 불확실성 여전”

“사실상 권력 공백 불가피”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절차가 남아 있어 한국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외신들이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특히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등 중대한 시기에 리더십 공백은 중요한 정책 결정 및 대응에서 실기(失期)하는 등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법적 절차가 남아 있고 그 기간 사실상 권력 공백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정부 서열 2위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지도자 역할을 맡지만, 그는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 증가나 트럼프 백악관 복귀와 같은 도전에 직면한 한국을 실질적인 정치적 무게감 없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은 이제 장기간의 불확실성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WP는 “현재는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

를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은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며 “또 현재가 국회의 결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 총리가 맡겠지만, 한국의 리더십 공백은 미국 대통령 교체 및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시기와 맞물려 있다”며 “분석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아시아 주요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의 권력 공백은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하고 외교 정책 및 무역 조정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WP는 이와 관련,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관세 인상과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을 예고했다고 상기했다.

영국 BBC방송은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이 결정(탄핵)은 아직 헌법재판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계속 싸울 것을 다짐했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표결을 자신 대통령직의 ‘일시적 중단’으로 묘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스



국회 앞으로 모인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뉴스

## 조국 “이제 잠시 멈춘다... 빈자리 메워달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 수감을 하루 앞둔 15일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의 부재’를 메워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제 잠시 멈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공개했던 ‘3년은 너무 길다’ 포스터를 공유하면서 “지난 2월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최초 발언한 뒤 299일 만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

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며 “국민 덕분에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19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직을 수락했고 올해는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과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창당했다”며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형 집행 연기 신청을 허가 받아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 尹, 소환 통보에 불응... 검찰, 2차 소환 예정

검찰, 광종근 전 사령관 구속영장 김용현 “검찰 불법수사...진술 거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특수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인물로 지목된 광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형

사방해 등 혐의로 광 전 사령관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 전 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께 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제1공수여단과 제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 전 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을 국회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라는 김용현 전 장관 지시가 있었지만 이에 불응했다고 했다.

국회에 실탄을 가지고 갔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계엄군 개개인에게 주지 않고 차에만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공지를 통해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수사를 자행했다”며 “이에 저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12일 검찰은 변호인의 선임계 접수 거부하고 검사실 출입 자체를 막아 피의자와의 접견을 방해했다”며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함부로 조사하는 초유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일보 구독 m.jnilbo.com